

나약한 노점상의 허물을 벗고 민주세상, 참 평등의 세상을 건설!!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제 목	서울시 노점관리 조례 추진 관련 서울시의회 의장 면담요청	
수 신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참 조		
발 신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담당 : 김나영 대외협력실장 010-4000-8410
주 소	minjunojum@gmail.com / newnojum.org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서울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시민들과 소통하는 서울시의회 의장님이 되시길 기대합니다.
2. 지난 2월 23일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은 TBS와의 인터뷰를 통해 '노점 삼진 아웃제'가 포함된 서울시 노점관리 조례를 추진 중이라 밝혔으며 4월 정기회기 제출을 목표로 현재 입법 검토 중이며, 늦어도 6월 회기에는 제정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3. 민주노점상전국연합(이하 '민주노련')을 비롯한 전국노점상총연합(이하 '전노련'), 대전국노점상연합(이하 '대노련') 등 노점단체에 소속된 노점상 회원 중, 서울지역만 해도 3,000여명의 회원이 존재하고 있으나 정작 당사자인 노점상과의 만남이나 논의,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청취는 단 한 차례도 진행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조례가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4. 또한 노점상인들은 작년 1월, 한국직업사전에도 나와있는 엄연한 직업인 노점을 사회경제 주체로 인정하고, 세금을 내며 떳떳하게 장사할 수 있도록 하는 '노점상 생계보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5만국민동의 청원을 성사시켰고, 현재 이 법은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5. 하지만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불법노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노점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노점관리 조례제정을 통한 불법 노점 철거가 자신의 '정치적 위시리스트'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노점상들의 생존권을 말살하려 하고 있습니다.
6. 이에 민주노련을 비롯한 전노련, 대노련 등 노점단체들은 <서울시 노점말살 조례 저지 노점단체 대책위>를 구성하여 노점상을 불법화하고, 노점상들의 의견을 철저히 배제한 채 추진되고 있는 서울시 노점관리 조례에 관한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님의 의견을 듣기 위해 아래와 같이 면담요청을 드리는 바이며, 빠른시일 내로 면담날짜를 잡아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아 래 -----

- 장소 : 서울시의회 의장실
- 날짜 : 2023년 3월 중, 김현기 의장님 일정에 맞춰 진행

- 면담참석자 : 서울시의회
 - :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 서울시 노점말살 조례 저지 노점단체 대책위
 - : 민주노련 중앙대표
 - : 전노련 중앙대표
 - : 대노련 중앙대표

- 첨부자료 : 서울시 노점관리 조례 관련 노점단체 입장문

2023년 3월 21일

민 주 노 점 상 전 국 연 합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1가 45-1.청원빌딩3층

<http://www.newnojum.org>

전 화 (02)900-5868, 팩스 (02)703-5868

상 호 민주노점상전국연합(KOREA DEMOCRATIC STREET VENDERS CONFEDREATION)

※ 첨부자료. 서울시 노점관리 조례 관련 노점단체 입장문

노점상을 다 죽이겠다는 서울시 노점관리 조례 추진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저희는 <서울시 노점말살 조례 저지 노점단체 대책위(이하 '노점말살 조례 저지 대책위')>입니다. <노점말살 조례 저지 대책위>는 민주노점상전국연합(이하 '민주노련'), 전국노점상총연합(이하 '전노련'), 대노점상전국연합(이하 '대노련') 등 노점단체들이 서울시 노점관리 조례 추진을 저지하기 위해 결성되었으며 민주노련, 전노련, 대노련 회원 중, 약 3,000여명이 서울지역 회원으로 소속되어 있습니다.

지난 2월 23일, 문성호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불법 노점에 대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노점 삼진 아웃제' 내용이 포함된 서울시 노점 조례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원이 3번 발생하면 강제철거를 집행하겠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현재 입법 조사 단계에 있으며, 다음 회기, 늦어도 6월에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점은 고용노동부에서 편찬하는 한국직업사업사전에도 나와있는 엄연한 직업 중 하나입니다. 또한 직업선택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노점상인들은 노점을 직업으로 인정하고, 벌금이 아닌 세금을 내고 떳떳하게 장사할 수 있도록 하는 '노점상 생계보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작년 1월 5만 국민동의 청원을 성사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법안은 국회 상임위에 회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문성호 시의원은 '불법노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또다시 노점을 범죄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껏 단 한차례의 노점당사자 의견청취는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조례추진이 '노점 양성화를 위한 선도의 목적'이라면서도 노점상을 불법화하고, 노점상의 의견은 철저히 배제된 채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목적이 어떻게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인지 심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그 동안 '상생'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었던 모든 서울시 노점 정책의 진짜 목적은 노점 감축이었습니다. 매년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서울시 노점상 현황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노점감축은 서울시의 복지정책이 발전하고 시민들의 생계가 나아져서 만들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전히 많은 시민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채 힘들어하고, 심지어 목숨을 잃고 있다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노점은 가난한 이들이 먹고 살기 위해 선택하는 마지막 보루이자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따

라서 노점상에게 강제철거는 생존권을 박탈하고 죽음으로 내모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사상초유의 경제위기로 전 국민이 허덕이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복지 사각지대로 인한 안타까운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민하고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서울시 의회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몇몇 악성민원을 이유로 노점상을 다 죽이겠다는 조례를 추진하는 것이 결코 서울시의회의 역할은 아닐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생존권은 시의원 한명의 '표'를 얻기 위해 철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 즉시 서울시 노점관리 조례 추진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노점말살 조례 저지 대책위는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서울시 노점관리 조례 추진을 즉각 중단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서울시 노점말살 조례 저지 노점단체 대책위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전국노점상총연합, 대전국노점상연합)